투데이 칼럼

한 많은 용담댐! 진안군 우리 몫 찾자

김 정 길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 회장

용담댐이 품은 물은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북권 150만 도민들에게는 생명의 물이요, 희망의 물이다.

그러나 정작 진안군민에게는 삶의 터전을 앗아간 피눈물 같은 것이요, 규제로 일상을 볼모 잡은 한스런 것이다.

전북도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용담댐 조성 전 2000년까지 전주시는 심한 가뭄이 거듭되며 방수리 취수장을 비롯해 전체 하천과 저수지가 말라붙어 물통 들고 비상 급수하던 그 시절 기억들!

익산·군산시는 충청권 하류지역인 금강하류 부여취수장에서 충남도에 물 값 연 40여억원을 지불하면서 4급수에 해당되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받던 그 시절 기억들!

현재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다수의 도민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불편 없이 물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다른 한쪽의 진안군민들은 현실적 대책을 세워볼 겨를도 없이 내 땅과 내 삶의 터전과 경제활동을 잃는 아픔에 더해 일상의 규제까지 받아야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용담댐 1급수 지키기를 위해 지난 2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훔치며 살아왔는지 모른다.

한맺힌 용담댐 수몰민!

천길 물속에 고향을 묻으며 봉고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마지막 떠나가는 정든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허탈한 마음으로 바라보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어야 했던 수몰민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병을 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삶의 터를 버리지 못해 인근에 터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수몰 주민들, 이제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도 우리 모두가 어루만지고 보듬어야 할 때이다.

진안군 우리 몫 당당히 찾자!

용담댐 수몰로 인해 진안군의 1/3 지역인 6개 읍면, 2,864세대 인구 12,616명의 대이주 속에서 1992년 용담댐 착공 전 건설 관계자와 전북도·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쏟아냈던 그 약속들은 어디가고, 상수원 눈앞에서 살고 있음에도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했던 지역에 20여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지금에서야 전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계획 사업비 867억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인 게 현실이다.

당초 1992년 전북도가 약속했던 1일 135만톤(1년 약 5억톤)의 물 사용비용 및 발전판매수익금의 50/1000을 진안군에 배당하겠다고 약속한 약 380여억원의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진안군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용담댐 물을 이용하여 연간 380억원 정도의 수익금을 올린다면 그 수익의 상당액은 마땅히 진안군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현재에 이르러 당초의 약속들은 온데간데없고 누구 한 사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전북도는 진안군민에게 의무만 지워주는 게 아닌가 싶다. 진안군민들은 지금도 용담댐이 살아야 전라북도와 진안군도 산다는 슬로건 아래 용담댐 물을 1급수로 지켜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

대청댐의 경우에는 상류지역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시민단체에 매년 5억원을 지원해 수질보전활동사업 및 수몰민 만남의 날과 위안 잔치를 열어주고 있듯 용담댐도 수질보전활동 및 수몰민 지원과 그들의 생계 문제까지를 걱정해주는 전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

용담댐 담수 이후 20여년이 흐른 지금 진안군민은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여 우리의 몫을 확실히 찾아와야 할 것이다.

기고문

작은 안전수칙들이 만드는 안전한 공사현장

안 우 삼
남원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소방경

흐드러지게 벚꽃이 피다지고 알록달록한 철쭉과 봄꽃들이 피면서 거리엔 상춘객들로 가득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되어 사람들의 걸음걸음에도 활기가 넘친다.

우리가 이렇게 봄을 느끼며 새 생명에 대한 경의감을 표할 때마다 아름다운 봄을 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우리네 꽃들이 생각나 마음이 시리다.

지난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꽃다운 청춘 3명이 순직하고 책임자 44명이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젊은 청춘을 잃은 아픔은 치유조차 되지 않고 비슷한 대형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평택 공사장 화재 외에도 2019년 3월 용인 대형쇼핑몰 공사장 화재로 작업자 1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에서는 근로자 38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돼 아픔 가슴을 더욱 짓누르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524건이 발생하고 4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공사장에서 흔한 용접작업은 작업중 불티의 온도가 약 1600℃ ~ 3000℃의 고온으로 작업장소의 높이에 따라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흩어진 불티는 스티로폼 단열재, 가연성 자재가 많은 건설현장에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가연성 도료, 인화성 물질, 단열을 위한 석유화학제품등 가연물이 넘쳐나는 밀폐된 건설현장에서 용접·용단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게다가 대형 공사장의 경우 내부공간이 미로 형태처럼 복잡하고 다수인력이 투입돼 작업을 진행해 자그마한 실수, 부주의 하나가 공사현장을 불바다가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 자그마한 실수, 부주의만 막아 안전한 공사현장을 위한 팁들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작업자는 용접·용단작업 전에 충분한 환기를 한 후에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작업장 주변에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을 제거하고, 용접작업 장소에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소화기·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는 방법(불꽃받이 또는 불연성 포대)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임시 가설전기, 가스시설 등의 안전성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업주는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소화전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하고, 화재감시자로 하여금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임시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의 존재나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작업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비상연락수단을 확보하여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접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1시간이상 확인을 해야 한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불씨가 가연물과 접촉해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장 화재현장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사자성어가 있다.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露積成海)'인데, 공사현장에서 평상시 지킬 수 있는 환기·소화기배치·개인보호장비 착용 등의 작은 안전수칙들이 모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안전수칙들이 모여 커다란 안전현장을 만들어가듯이 작은 불꽃에도 주의하여 부디 매년 봄을 동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 설

노인 보호구역 CCTV 설치 문제

노인 보호구역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가 절실하다. 노인 시설은 도로교통법 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교통 소외 계층인 노인 시설은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은 시설 기관장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관할 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일부 노인 시설 가운데는 아직도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속하지 않은 곳이 있다.

보호구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주정차 위반도 여전하다. 주정차 위반은 CCTV로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다. 단속요원을 통한 계도는 한계가 있다.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원인은 과속이 주범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의식 변화가 관건이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특히 어르신 교통 사망사고는 절반가량이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 등의 다양한 지역 치안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이 많다. 회전식 교차로도 늘려야 한다. 주변 인도와 차도 구분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CCTV와 가로등 설치는 필수다. 그러나 CCTV는 크게 부족하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도 미흡하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법 체계가 차량소통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교통 약자와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어르신에 대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중요하다. 노인 보행자를 위한 야간지팡이, 홍보 현수막 등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인 보호구역 확대로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바란다.

정운천 의원 동물보호법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방송 촬영에 이용된 말이 제작진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 보호에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였다. 이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를 유발하기 위해 말을 일부러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건이다.

해당 촬영 장면이 공개되며 동물 학대 논란이 일자, 방송사는 거듭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자체적인 동물 출연 관련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위험한 동물 촬영은 가능한 CG를 사용하고, 살아있는 동물에 인위적으로 해를 입히는 장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현장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 관계자와 동물보호단체 간의 큰 입장차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있다. 정 의원 은 연출자의 자율에 맡길 경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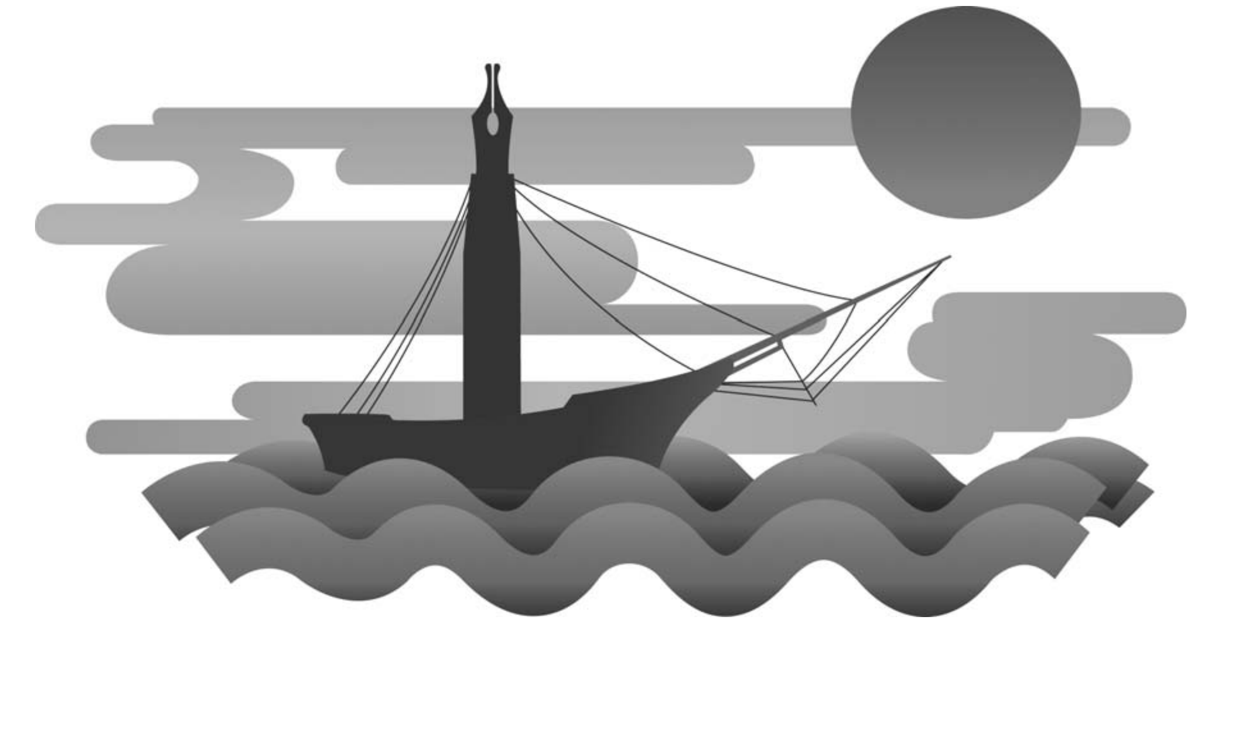
정운천 의원은 "촬영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촬영 동물이 적절한 사육과 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어떠한 학대 행위도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 학대가 갈수록 늘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도 크게 늘었다. 동물 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과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 역시 절실하다.

국회는 이미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됐다.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등록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 격리 조치 및 소유권 제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